

이낙연 전 총리, 전주대서 초청 강연... 새만금 예산 삭감 비판

“잼버리 파행 빌미로 삭감, 전례 없는 일”

“파행 문제는 그것대로 수습
새만금은 새만금대로 추진해
전북의 불만족 벗어나도록 해야”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누리홀에서 최근 펴낸 책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토대로 한 초청강연회에 참석, '돌고래 외교론'을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큰 고래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잡아먹히는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 민첩하고 영리한 돌고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이 전 총리의 철학이다.

또한 이 전 총리는 이자리에서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을 빌미로 정부가 새만금 국가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날 전북지역 초청강연은 연대와 공생'을 비롯해 '젊고 강한 전주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전북청년21'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이날 행사장에는 약 300여명의 시민,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임기가 끝나는)3년 반이나 4년을 기다릴 상태가 아니고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이라며 “국내정책과 정치가 잘못되면 국회사 연문, 다음 선거를 통해 바꾸면 되지만 대외정책은 한번 어긋나면 10년, 20년이 걸리는 만큼 예민한 국제질서에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최근 정부와 여당을 비롯해 일부 언론 등에서 잼버리와 관련해 전북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잼버리가 파행을 겪게 돼 전북도민들께서 상심이 컸을 것"이라고 위로를 건넨 뒤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30년을 끌어온 새만금 사업의 희망과 꿈이 더디어 끝나는 가 했는데 또 다시 장기화가 될 우

려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특하면 그랬듯이 곧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국회에서도 무엇인가를 하게 될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현 정부가 자기들의 할 일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지방이나 전입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사업을 위축시키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축소하려는 생각을 혹시라도 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멈추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어 “파행의 문제는 그것대로 수습하고 새만금은 새만금대로 추진해 전북의 오랜 경제적 사회적 불만족을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날(29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나서도 이런일을 핑계로 새만금이나 지방자치제도 축소를 기도한다면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전 총리는 “현 정부의 청년 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요청에 “전 정부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남의 이야기하듯 말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어 올해 경제성장전망치가 1.4%대로 아무리 늦어도 (윤석열 대통령)재임 중에 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의 슬로 다운을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다른 나라보다 잘하는 스타, 자동차 이전진지, 메디컬 케어 등의 산업을 키워 청년들이 미래를 투자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해야 하는데 아직 이런 다할 정책이 드러나지 않아 안타깝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9일 전주대학교에서 강연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 예민한 국제질서에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개혁과 정치 신인 배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종잡을 수 없는 삭감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새만금)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돼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런 때 민주당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해줘야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70%를 삭감하고 20%만 남겼다는 것은 그건 그냥 삭감이 아니다. 경제부처, 예산부처 관행에 없는 일이다. 이런 비상한 상황에 투쟁을 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강한 단합을 주문했다. 이 전 총리는 새만금과 관련 2018년국의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런 소규모 북콘서트를 한다는 계획이다.

명했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장기 예보에 따르면 지붕이 없는 야외 개막식장의 기온이 영하 19도로 예보돼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다. 방풍벽, 객석 통로 바람막이, 강력 히터, 전 좌석 방식 분부석 담요 등은 물론 개막 공연을 위해 180억원 추가 지원을 지시했다. 결국 드론쇼까지 펼쳐 성공적인 개막을 치르게 됐다. 이번 잼버리도 정부에서 조금만 일찍 살펴 보고 지원했다더라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잼버리를 새만금 개발에 이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한다"면서 “동계올림픽 당시 서울-강릉 KTX, 서울-평창 고속도로가 그랬고 2012년 비공인 여수엑스포 당시 익산-여수 KTX가 그랬다"며 “이를 통해 모든 지자체가 커졌다. 전북도 그런 지지를 두려워하지 말고 청문회 등에서 잘 설명하고 보강할 것은 과감히 받아들이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낙연 전 총리는 “잼버리 사태는 국민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며 “전북은 너무 위축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재훈 기자

“앞에서는 교원회복, 뒤에선 엄정대응”

전교조 전북지부 “재량휴업일, 학교 사정 따라 사용 가능 학습권 침해·불법이라는 교육부 표현은 거짓 선동 교육감이 정권의 부당한 요구 수용한다면 총력 투쟁 나설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에서는 교원회복을 외치면서 뒤에선 엄정대응을 말하는 이중배반적인 전복교육청"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보도자료를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8월 25일 배포한 34 교육회복의 날 입장문에서 교사들의 추모 행동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10월 2일 설정해놓은 재량휴업일을 9월 4일로 변경하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전복교육청은 입장문 배포 당일 오후 교육감 입장문과는 배치되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발송했다는 것. 공문은 법령 준수와 2학기 학사운영 및 교원복무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라는 내용이었고, 불임으로 교육부의 복무관리 철저 공문을 넣었다고 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은 일대 숙대발이 됐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의 상당수 학교는 오는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정하고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공문으로 대다수의 학교가 재량휴업일을 취소했다"고 언급했다.

일례로 A학교 교장은 “입장문과 전

혀 다른 교육감의 태도가 실망스럽고 유감이다. 결국은 학교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 아니냐. 교육감의 오락가락 행보에 불만을 표출했다"라고 했다. 다른 초등학교의 C교사는 “전복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학교들이 난리가 났다. 재량휴업일 결정을 한 학교도 다시 회의를 열고 재량휴업일 결정을 취소했다"라고 했다. 또 전교조는 “전복교육청의 교사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교육청의 행태는 이중배반적이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지난 8월 28일에도 전복교육청은 ‘집단행동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교사들의 추모행동을 금지했다고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으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기본적 휴가권"이라며 “학습권 침해나 불법이라는 교육부의 표현은 거짓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정권의 부당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새만금 국제공항 원안대로 추진하라”

경제·체육·사회·여성 등 도내 5개 분야 209개 단체들 “잼버리 연계 공항 건설 모략하는 행위에 맞설 것”

전북의 경제·체육·사회·건설·여성 등 분야의 209개 단체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지역 5개 분야 209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은 2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새만금 내부 개발의 핵심이자 전북이 동북아 물류허브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이라며 “잼버리 대회와 연계해 공항 건설을 모략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새만금 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명백한 전북의 몫"이라며 “전북 취업 인구 수가 적고 경제 규모가 작은 지방은 공항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예



새만금국제공항조기건설추진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전북도청 현관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정상 추진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은 한때 200만명이 넘는 인구가 풍요의 고장으로 불렸었는데 현재는 180만명 선마저 무너져 도시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며 “이는 인구 주류 사업"이라며 “잼버리 대회와 연계해 공항 건설을 모략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들은 전북의 자립성장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이러

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전북이 자립 성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기반"이라며 “새만금은 최근 경쟁력있는 기업 유치에 힘을 주고 있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도 지정돼 대한민국의 그린 뉴딜 대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북의 국가예산 중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새만금 SOC 10개 사업의 예산 662억 중 무려 75%에 달하는 514억원이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됐다. /뉴스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교조 전북지부 “재량휴업일, 학교 사정 따라 사용 가능 학습권 침해·불법이라는 교육부 표현은 거짓 선동 교육감이 정권의 부당한 요구 수용한다면 총력 투쟁 나설 것”

전교조 전북지부는 “재량휴업일, 학교 사정 따라 사용 가능 학습권 침해·불법이라는 교육부 표현은 거짓 선동 교육감이 정권의 부당한 요구 수용한다면 총력 투쟁 나설 것”

전교조 전북지부는 “재량휴업일, 학교 사정 따라 사용 가능 학습권 침해·불법이라는 교육부 표현은 거짓 선동 교육감이 정권의 부당한 요구 수용한다면 총력 투쟁 나설 것”

전교조 전북지부는 “재량휴업일, 학교 사정 따라 사용 가능 학습권 침해·불법이라는 교육부 표현은 거짓 선동 교육감이 정권의 부당한 요구 수용한다면 총력 투쟁 나설 것”

전교조 전북지부는 “재량휴업일, 학교 사정 따라 사용 가능 학습권 침해·불법이라는 교육부 표현은 거짓 선동 교육감이 정권의 부당한 요구 수용한다면 총력 투쟁 나설 것”

민주, 정부 예산안에 “재정준칙도 안지켜”

“사상 첫 수입 줄어
무능·무책임 등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입이 감소해 나라 곳간은 거덜 나고 약속한 재정 준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강홍식 예결위 간사 명의로 낸 논평에서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당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뿐 아니라 최근 10년간 총수입이 감소한 경우는 없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상 초유로 전년보다 총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편성했다"며 “수입이 감소해 나라 곳간은 거덜 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 곳간을 채우려는 노력이 찾아보기 어려워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내년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에도 올해 세수와 내년 세수가 많이 감소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와 대규모 감세 기조에 따라 세입 기반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60% 이하일 때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도 못 지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다.

2024년 정부예산안에서 재정적자 규모는 92조원이고 GDP 대비 비율은 3.9%다.

이율러 “정부는 사상 초유로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 31조3000억원에서 내년 25조900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미래대비 투자는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줄어드는 민생사업도 있다. 근시안적 사고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투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릴 예정"이라며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고 희망을 드리는 예산안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은 올해보다 13조8000억원 감소한 612조1000억원 총지출은 18조2000억원 증가한 666조9000억원이다. 이로 인한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는 9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3.9%, 국가채무는 1196조2000원으로 GDP 대비 51.0%다. /뉴스시스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23년도 제28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29일 열린 본회의에는 한경연군산시연합회 등 시민들이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2회 군산시의회 위상을 알리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과 화학물질사고 예방 및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 새만금 위기 극복 지자체 등 공동 대응 방안 마련 건의안을 가결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과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설치, 새만금 위기 극복 지자체 등 공동 대응 방안 마련 촉구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시의회는 9월 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의원들의 조례안인 김영란 의원의 ‘군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서동환 의원의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한경봉 의원의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 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23년 1회 추경예산보다 970억원이 증액된 1조7850억원이다. /군산=김필관 기자